



국제리뷰

- 제59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 주요 의제 및 논의사항
양인숙 | 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유럽연합의 성 주류화 노력 및 벨기에의 성인지예산제도 운영현황
정가원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제59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 주요 의제 및 논의사항

양인숙 | 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1. 들어가는 글

유엔여성지위위원회(UN Commission on the Status of Women, 이하 CSW)는 1946년 경제사회 이사회(Economic and Social Council, 이하 ECOSOC) 결의에 의거하여 설립되었다. CSW는 여성지위향상을 위한 효율적인 이행방안을 검토하여 정치/경제/사회/교육분야에서의 여성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을 ECOSOC에 보고하며, 여성분야에 있어서 ECOSOC이 관심을 기울여야 할 긴급사항에 대해 권고하는 기능을 한다.

CSW는 매년 3월 초순에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된다. 2015년에는 3월 9일(월)부터 3월 20일(금)까지의 기간에 개최되었는데, 이번 제59차 회의에는 한국을 대표하여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을 포함하는 정부 대표단과 비정부기구(NGO) 활동가들이 대거 참석하였다.

본 회기에서는 우선순위 의제로 ‘양성평등 실현, 여성 권한강화 및 여성과 여아의 인권을 위한 행동계획 우선순위(Priorities for future action to realize gender equality, the empowerment of women and the human rights of women and girls)’를 채택하였으며, 검토 의제로는 ‘여성과 여아가 참여가능한 경제 만들기(Making the economy work for women and girls)’가 논의되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여성가족부의 전문가 파견요청으로 매년 CSW에 참가하고 있으며, 올해 제59차 회의에는 3월 16일(월)에서 3월 20일(금)까지의 둘째 주 기간에 참석하였다.



2. 주요 공식회의 의제 및 논의 사항

첫째 주 회의에서는 1995년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4차 세계여성회의에서 채택한 ‘북경행동강령 20주년’을 기념하고, 양성평등 및 여성역량 강화에 필요한 과제 점검과 향후 국제사회 개발과제를 통합적인 성인지 관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의 정치선언문이 채택되었다.

본 글에서는 필자가 참석한 둘째 주 주요 공식회의를 중심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CSW의 공식회의는 패널리스트들의 주제발표가 15분 내외로 이루어지고, 각국 대표가 3분 동안 동 주제에 대한 자국의 성과와 패널 발표에 대한 질문, 코멘트로 진행된다.

3월 16일(월) 공식회의에서 다루었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남성과 남아의 책임(The responsibility of men and boys in achieving gender equality)’ 주제는 1995년 베이징행동강령 선언 이후, 양성평등과 여성의 권한강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남성들과의 협력이 얼마나 진전되었는가에 대해 논의되었다. 베이징선언 이후 20년 동안, 남성들이 자신의 특권과 불공평한 규범들을 지속시키는 구조, 신념, 관행, 제도를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남성의 역할과 책임을 이해하고 수행하는 것이 주요한 과제가 되었다. 미국 프로먼도^{PROMUNDO}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남성참여 촉진 단체)의 게리 바커^{Gary Barker}는 폭넓은 양성평등 의제 안에서 남성의 역할에 대한 규범적 이해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즉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더 넓은 영역에서 권력을 재분배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남성 참여 프로그램과 프로젝트들을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덴마크 양성평등부^{Ministry of Gender Equality} 특별고문인 쇠렌 펠드백 윈더^{Søren Feldbæk Winther}는 덴마크 정부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남성과 남아의 참여 정책으로 건강/보건 영역의 성 주류화,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 돌봄노동의 남성 분담 정책을 소개하였다.

3월 18일(수)에 다루어진 ‘주변화 및 소외계층 여성과 여아들의 권리실현(Realizing the rights of marginalized and disadvantaged women and girls)’ 의제에서는 한국의 김은미 교수(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장)가 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고문 자격으로 ‘발전을 위한 개발과 정책적 선택에서의 여성농업인의 역할(The Role of Rural Women in Development and Policy Options for Progress)’에 대해 발표하였다. 한국은 한국전쟁 이후, 한 세대만에 놀라운 경제적 발전을 이룬 경험을 가지고 있다. 한국의 농촌여성들은 국가경제개발 초기단계에서 주변화 및 다양한 차별을 경험하였으며, 1960년대 농촌지역에서는 경제개발에 집중되었기 때문에 농촌여성들은 교육, 고용, 정치참여 등에서 배제되었다. 1970년대 한국정부는 농촌발전프로그램인 새마을 운동을 전개하였고, 비록 새마을운동이 여성의 권한강화를 위한 것은 아니었으나, 여성에게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였다. 가정 밖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었고 리더십 교육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마을공동체를 가족계획 캠페인으로 끌어들이 수 있었다고 밝혔다.

케냐 HIV 감염 여성의 국제법 단체의 전문가인 테레시아 노키 오티에노^{Teresia Njoki Otieno}는 여성, 특히 젊은 여성, 여아에게 요구되는 세계적 HIV 전략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HIV보균 여성들은 수준 이하의 건강관리를 받고 있으며, HIV보균 여성들은 강제적 불임수술과 낙태를 강요받는 등 심각한 인권침해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HIV보균 여성 세계적 의사결정 플랫폼을 구축할 때 그들의 요구와 목소리를 듣고 반영해야 하며, HIV보균 여성을 지원하기 위한 단체, 연합회 등 파트너의 동맹적 활동이 중요한 과제라고 재차 강조하였다.

이에 대한 주요국 발언으로 미국은 소외계층 여성들의 폭력 피해가 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여성노인, 미국 인디언 여성,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이주여성, HIV 보균 여성, 성적 소수자(LGBT)인 여성들에 대한 성폭력 피해가 더 높게 나타난다고 밝혔다. 멕시코는 10대 임신이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되었으며, 10대 임신 청소년의 상대는 같은 10대 청소년이며, 심지어는 9살, 10살, 11살로 더 나이가 어리기도 하다. 나아가 임신 청소년의 상당수는 성폭력 피해자로 10대 엄마들에 대한 교육받을 권리 등 포괄적인 정책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3월 19일(목)에는 ‘MDG에서 SDG(지속가능한 개발목표)로의 이행 - MDG를 통한 양성평등 관련 교훈 및 변화 활성화’란 의제가 논의되었다. 피지의 평등을 위한 다양한 목소리와 조치^{Diverse Voices and Action for Equality} 단체의 고문인 노엘린 나부리보^{Noelene Nabulivou}는 MDG에서 SDG로 이동함에 있어, 2015 포스트 개발 아젠다는 완전한 양성평등과 여성의 인권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성적 소수자(LGBT) 등에 대한 보이지 않는 폭력과 차별을 종식시키는데 집중해야 하며, 보편적 인권 의식 제고를 위해 차별과 폭력으로부터의 보호정책과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3. 나가는 길

CSW 회의는 여성관련 이슈의 유엔 총회라 할 수 있다. 올해는 1995년 ‘베이징 행동강령’ 채택 20주년을 기념하여 그동안의 성과를 점검하고 새로운 의제개발의 의미를 가지는 회기였다. 여성인권을 비롯한 교육훈련에서부터 국제이주, 건강, HIV, 노화, 강제 조혼(forced early marriage), 여성 생식기 절단(female genital mutilation)까지 다양한 젠더관련 이슈가 다루어지는 가운데, 각국의 사회문화, 경제, 정치적 상황에 따른 젠더정책의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다. 한국은 올해 젠더정책의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였다. 여성발전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변경되어 2015년 7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를 계기로 젠더이슈가 여성에 대한 차별해소에서, 성평등 선진화를 위한 여성간 차이와 다양성에 대한 의제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유럽연합의 성 주류화 노력 및 벨기에의 성인지예산제도 운영현황

정가원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1. 들어가며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예산센터에서는 다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난 5월에 벨기에 브루셀을 방문하였다. 첫째, 유럽 경제위기 이후 유럽 성 주류화 정책의 흐름과 향후 전개방향을 가늠해보고, 유럽의 성평등 증진을 위한 유럽연방 차원의 추진전략이 무엇인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둘째, 벨기에의 성인지예산제도 운영현황을 검토하고 제도운영 선도국으로서의 공통과제를 진단하여 개선방안을 함께 모색하고자 하였다.

2. 유럽 내 성 주류화 동향

현재 유럽연합 차원에서의 성인지예산제도는 운영되고 있지 않다. 유럽연합은 단일국가가 아니며 따라서 자체적으로 재분배 정책을 시행할 수 없고 이를 위한 재원도 마련되어 있지 않기에 유럽연합에서는 각 회원국 내에서 성인지예산제도를 운영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 유럽집행위(European Commission),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에서 공동의 성평등목표(Gender equality targets)에 대해 합의해야 하며, 특히 유럽연합 예산의 소입과 지출을 담당하는 유럽집행위에서 예산과정에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되고 있다.

유럽연합 회원국 중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벨기에 및 북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성인지예산제도가 정착되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반면 남유럽 국가에서는 성인지예산제도가 활발하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어 회원국 간에도 상당한 편차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유럽연합에서는 성인지예산제도 운영국가의 모범사례 공유와 확산, 각 회원국에서 성인지예산제도를 운영할 경우 유럽연합 차원의 인센티브 지급, 회원국 간 성인지예산 네트워크 및 학습망 구축 등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유럽 금융위기의 여파로 유럽연합의 재정통제와 규제를 받고 있는 일부 회원국에서는 성인지예산제도 운영의 당위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심한 경우 성 주류화 제도의 운영기반 자체가 긴축정책으로 인해 심각하게 약화되고 있다. 특히 루마니아와 스페인에서는 성평등 관련 정부기구가 폐지되었으며 덴마크, 아일랜드, 체코에서는 성평등 관련 정부기구가 타 기구와 통합되었고, 영국과 그리스에서는 매우 큰 예산 삭감이 이루어졌다.

유럽연합에서는 이러한 상황일수록 성인지예산제도는 더욱 필요하며 회원국 내 긴축정책이 성평등에 미친 영향이 체계적으로 분석되어 추후 각 회원국의 경제 및 재정정책 설계 시 필수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또한 성인지예산제도가 긴축정책의 성차별적 영향을 파악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 필수적인 도구이며, 따라서 유럽의 경제위기 이후야 말로 성인지예산제도가 반드시 도입되고 정착되어야 하는 적기라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

3. 벨기에의 성인지예산제도

벨기에에서는 Institute for the Equality of Women and Men(IEWM)에서 성 주류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기능과 역할을 함께 담당하고 있는 정부기구로 노동부 산하 하나의 부서에서 출발하여 2002년에 여성정책 업무를 전담하는 독립기구로 전환되었다. IEWM에서는 정부업무의 성 주류화의 전체 과정을 관리하고 지원하며 연구를 통한 정책지원, 성평등 증진을 위해 공공기관에 대한 권고, 성차별 피해자에 대한 법적 지원 등의 업무를 포함한다.

IEWM이 성인지예산제도의 운영에서 담당하는 역할은 다음과 같다. IEWM은 전체 연방부처가 예산과정에서 성인지예산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코칭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2008년에는 재정부 및 기획평등부와 함께 성인지예산 젠더노트¹⁾ 양식을 개발하였다. 2008년부터 재정부에서 회람하는 예산요구안 관련지침에 성인지예산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기 시작하였음 2009년부터 연방정부의 각 부처는 세출과 관련하여 사전 젠더분석을 실시하고 난 뒤 예산편성을 하도록 의무화되었다. 2010년에는 IEWM에서 젠더노트에 대한 사후평가 원칙을 수립하고 평가결과에 대해 재정부와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2011년에는 IEWM에서 성인지예산 매뉴얼을 발간하였으며 성인지예산 관련 부처 간 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벨기에의 성인지예산은 단위사업 수준에서 적용되고 있으며 각 사업담당자는 자신의 사업유형을 구

¹⁾ 사업담당자는 자신이 담당하는 사업이 왜 성평등 개선을 뚜렷하게 표방하는 사업인지에 대한 설명을 젠더노트에 작성해야 함. 작성된 젠더노트는 해당 사업예산 요구의 근거가 됨. 젠더노트는 일반예산요구안에 첨부되며 재정부는 이를 취합하여 확정함

분하고 유형2와 유형3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젠더노트 또는 젠더커멘트를 작성해야 한다. 젠더노트 및 젠더커멘트에 담기는 주요 내용은 자신의 사업이 왜 유형2 또는 유형3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설명이다. 유형1에 해당하는 사업은 성인지적 예산분석이 필요 없는 사업, 유형2에 해당하는 사업은 성평등 개선을 뚜렷하게 표방하는 사업, 유형3의 사업은 예산의 성별영향을 분석할 수 있는 사업이다. 이러한 사업유형에 따른 예산의 구분은 성평등 개선을 위해 활용되는 예산의 전체규모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IEWM에서는 매 2년마다 성인지예산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데 먼저 각 사업담당자가 사업유형을 제대로 구분하였는지를 1차적으로 확인하며, 2차적으로는 젠더노트 및 젠더커멘트의 적절성을 검토한다. 기획평등부에서는 IEWM에서 수행한 평가결과를 해당부처 장관 및 성주류화 담당관, 예산담당관에게 송부함으로써 추후 사업의 유형구분이 더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젠더노트 및 젠더커멘트가 더 내실 있게 작성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 시사점

세계적 경제위기에 따른 긴축정책 및 사회정책의 전반적 축소에 따라 양성평등이라는 가치에 기반하고 있는 성인지예산제도가 우리나라에서도 위축될 가능성이 있음을 유럽연합의 경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성인지예산제도를 통한 성평등 증진과 양성평등 실현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장기간의 모니터링과 분석이 필요하며 이러한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사실도 유념해야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양성평등이라는 가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현재 우리나라 성인지예산제도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에 있어서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제도를 추진하는 새로운 접근방식에 대해서도 탐색이 필요한 시점임을 알 수 있었다.

벨기에의 경우 사업유형을 성인지적 예산분석이 필요 없는 사업, 성평등 개선을 뚜렷하게 표방하는 사업, 예산의 성별영향을 분석할 수 있는 사업 중 하나로 구분하고 필요한 경우 젠더노트 또는 젠더커멘트를 통해 사업에 대한 간단한 성인지적 분석결과를 작성 및 제출하는 방식으로 성인지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성인지예산서 작성양식에 담겨지는 내용에 비해 훨씬 간단한 내용만이 담기는 벨기에의 다소 미온적인 접근방식은 공무원의 비협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는 IEWM 관계자의 언급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에서만 아니라 벨기에에서도 공무원의 성인지적 역량 강화는 아직도 이루어져야 할 숙제임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성인지예산 관련 글로벌 네트워크 및 학습망 구축에 대한 국제사회에서의 논의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우리나라의 참여가능성 및 역할에 대해서도 숙고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